

# 영광군, 11GW 해상풍력 ‘심장부’ 배후항만 조성 속도

향화도항 인근 20ha 최적지 선정  
郡, ‘지자체 계획-민간 투자’ 역할  
교육·체험 등 지역 상생 모델 ‘주목’

영광군이 전국 최대 규모인 11GW급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해상풍력 유지관리(O&M) 배후항만 클러스터’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28일 영광군에 따르면 군은 배타적경제수역

(EEZ)을 포함한 인근 해역에서 총 17개 발전사업자가 약 11GW 규모의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국내 최대 해상풍력 집적화 단지다.  
해상풍력 단지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발전기 점검과 수리, 부품 교체 등 유지관리를 위한 전용 항만이 필수적인데 향화도항 인근 약 20ha(약 6만평) 부지를 최적지로 선정하고, 이곳에 해상풍력 유지관리 항만 클러스터를 선제적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핵심은 ‘역할 분담’으로 군은 2026년 상반기 중 주요 해상풍력 발전사업자들과 업무협약(MO

U)을 체결해 행정과 투자의 영역을 명확히 구분할 방침이다.  
체결 이후 군관리계획 변경과 각종 인허가 등 복잡한 행정 절차를 주도적으로 처리해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발전사업자들은 유지관리 항만 건설과 O&M 지원 시설, 각종 기반 시설에 대한 직접 투자를 담당한다.  
이는 그동안 다 지자체에서 문제로 지적됐던 무분별한 민간 주도 개발의 폐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지자체가 확실한 방향을 설정하고 민간의 자본과 효율성을 접목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군은 초기 단계부터 주민 소통에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달 27일에는 향화도 어촌계와 대무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상풍력 배후항만 조성 및 지역산업 연계방안 기본계획 수립 용역’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영광 인근 해역의 해상풍력 추진 현황과 배후항만의 필요성, 입지 여건 분석 결과 등을 투명하게 공개했다.  
향후 조성될 클러스터에는 유지관리(O&M) 지원 시설뿐만 아니라 해상풍력 유지보수 선박(CTV) 집안 시설, 전문 인력을 길러낼 인증·교육 센터, 일반 관광객을 위한 홍보·체험관 등이

단계적으로 들어설 예정이다.  
군은 클러스터가 구축되면 관련 기업 유치는 물론, 지역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배후 상권 활성화 등 지역 경제 전반에 막대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해상풍력 유지관리 항만은 11GW 대규모 발전단지의 ‘심장’과도 같은 핵심 인프라”라며 “행정과 투자, 주민 소통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는 상생 모델을 만들어 영광을 대한민국 해상풍력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  
/영광=김동규 기자

## 인도 막은 ‘볼라드’...목포시민 보행권 실종

대형마트 진입로 전락...사고 노출  
市, 대체 도로 미확보 형평성 위배

목포 한 대형마트 앞 인도가 차량 진입로로 사용되며 방치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의 공유재산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28일 목포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관내 한 대형마트 앞 인도 구간이 마트 진입 차량의 차선으로 사용되면서 시민들의 보행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해당 구간은 법적으로 폭 3m 이상의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확보돼야 하지만, 마트 진입 편의를 위해 보행로의 기능이 상실된 상태다.  
실제 현장을 확인한 결과 엉뚱한 규격의 볼라드가 자전거도로로 외 구간을 막고 있어 노약자와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은 사고 위험을 감수하며 도로 위를 오가야 하는 실정이다.  
과거 LH가 행복주택을 건설하거나 다른 아파트들이 들어설 당시, 시 소유 인도를 진입로로 사용하면 그에 상응하는 사유지를 내놓아 대체 보행로를 조성했던 전례와 정면으로 배치되며 특혜 의혹마저 일고 있다.  
시민 A씨는 “대형마트가 수년 동안 공공의 재산인 인도를 사유지처럼 쓰는데도 시가 뒷집만 지고 있는 건 직무유기”라며 “무단 점용에 대한 사유료 부과능 대체 도로조치 확보하지 않은 건 행정의 무능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5일 목포 한 대형마트 앞 인도에 줄 지어 설치된 석재 볼라드가 보행로를 가로막고 있어 시민들이 차도와 인접한 좁은 자전거도로로 보행하고 있다. /목포=정해선 기자

문제는 목포시의 공유재산 부실 관리가 ‘고질병’처럼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신중앙시장 주차타워 운영 논란은 여전히 감사 중이며, 신흥동 현수막 게시대는 수년간 공유재산 목록에조차 오르지 못한 ‘유령 시설물’로 방치돼 왔다.  
일각에서 “시가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해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 목포시의회의 의원은 “목포시가 공유재산을 부실하게 관리하고 방치한 공무원에 대해 책임을 묻는 데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며 “시민이 위임한 권한은 법과 규정에 따라 행사돼야 함에도 자의적 판단과 제 식구 감싸기로 책임을 방기하

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관련 목포시 관계자는 “신중앙시장 주차타워 운영 문제는 현재 감사실에서 감사 중이며, 신흥동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공유재산 등록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조만간 현수막 담당 부서로 이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형마트의 인도 사용과 대체 보행로 미제공 문제에 대해 당시 마트 진입차선 사용에 대해서는 협의가 있었던 것 같다”며 “도로사용료 부과는 어렵지만, 볼라드를 옮겨 보행로를 확보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입장을 전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 신안군, 전국 최초 국가보조향로 직접 운영

내년부터 목포-우이도 등 4개 노선

신안군이 전국 지자체 최초로 국가보조향로를 직접 운영한다.  
28일 신안군에 따르면 최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주관한 ‘제6기 신안권역 국가보조향로 운영 사업자 선정’ 평가에서 최종 1순위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군은 오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목포-우이도 ▲응곡-신도 ▲북강-반월 ▲진리-재원 등 4개 향로를 직접 책임지고 운영하게 된다.  
군은 이번 운영권 확보를 통해 그동안 민간 위탁 체제에서 한계로 지적됐던 안전 문제와 열악한 선원 처우를 대폭 개선할 방침이다.  
특히 선박 내에서 숙식을 해결해야 했던 선원

들을 위해 기항지마다 ‘1인 1실’ 관사를 마련, 피로도를 낮추고 안전 운항을 담보한다.  
주민들의 뱃길도 빨라진다. 군은 기존 공영 향로와 중복되는 노선을 효율적으로 연계해 이동 시간을 최대 1시간 이상 단축하고, 육상 교통(1004버스·택시)과의 환승 체계를 강화해 섬 주민들의 이동권을 획기적으로 보장할 계획이다.  
김대인 신안군수 권한대행은 “주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공공이 책임지는 새로운 해상교통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신안=양훈 기자

## 강진군 ‘백금포 문화공간 1933’ 개관

미디어아트 기반 복합문화공간 조성

강진군은 28일 “최근 군동면 영포마을에 조성한 ‘백금포 문화공간 1933’ 개관식을 열고, 근대 산업유산을 활용한 새로운 문화관광 거점을 공식 개방한다”고 밝혔다.  
《사진》  
‘백금포 문화공간 1933’은 1930년대에 건립된 양곡창고를 리모델링해 조성한 시설로, 총사업비 28억원을 투입해 역사적 건축물의 원형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현대적 문화 콘텐츠를 접목한 것이 특징이다.  
해당 시설은 문화체육관광부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의 하나로 추진됐다. 2022년 12월 미디어아트 조성 공사를 시작으로, 2025년 10월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이번에 정식 개관했다.  
‘백금포 문화공간 1933’에는 미디어아트 전시 공간과 휴게·카페 공간이 조성돼 있으며, 과거 지역 물류의 중심지였던 양곡창고가 빛과 영상,

예술 콘텐츠를 담은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했다.  
이를 통해 관광객은 물론 지역 주민들도 일상 속에서 문화와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강진군은 향후 이 공간을 지역 문화예술인과

연계한 전시·체험 프로그램, 소규모 문화행사 및 관광 콘텐츠 운영 거점으로 활용해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강진군 관계자는 “백금포 문화공간 1933은 단순한 전시시설이 아니라, 지역의 역사와 기억을 문화로 재해석한 공간”이라며 “근대 유산을 보존하면서도 새로운 관광 콘텐츠로 활용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진=정영록 기자



## 함평군, 미래 비전 실현 ‘민·관 협의체’ 출범

행정·의회·민간 등 23명 구성

함평군이 지역의 ‘미래 비전 사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민관 협력에 나선다.  
28일 함평군에 따르면 최근 군청 소회의실에서 ‘민관 합동 협의체 출범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사진》  
협의체는 이상익 군수 등 행정위원 11명과 군의원 2명, 지역 사정에 밝고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 10명 등 총 23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앞으로 전남도와 중앙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유도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행정 기관이 직접 제기하기 부담스러운 정책적·재정적 애로사항을 민간 차원에서 공론화해 해결 실마리를 찾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출범식에 이어진 회의에서는 그간의 사업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향후 과제를 심도 있게 논



의했다.  
참석 위원들은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세부 실행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단계별 추진 전략을 통해 사업 실현율과 재정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함평군 관계자는 “협의체는 민간의 현장감 있는 목소리를 군정에 반영하는 핵심 창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함평=기영규 기자



## 진도군, 인구정책 6개 분야 ‘석권’ 쾌거

일자리·귀농어·투자유치 등 잇단 호평  
고향기부금 15억 돌파...재정 확충도

진도군이 올 한 해 인구 정책과 직결된 6개 분야 평가를 휩쓸며 ‘살기 좋은 고장’임을 입증했다.  
28일 진도군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전남도 등 상급 기관이 주관한 각종 평가에서 잇따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사진》  
이는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한계에 맞서 전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만들어낸 값진 성과로 우선군은 행안부의 ‘2025년 지방정부 일자리 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 이어, 전남도 ‘투자유치 종합평가’에서도 2년 연속 우수상을 거머쥐었다.  
특히 500억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통해 김 가공 시설 등 160여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도시민을 불러들이는 귀농·귀촌 정책도 빛을

발했다. 농식품부 주관 ‘농촌에서 살아보기 경진대회’에서는 지난해 최우수상에 이어 올해 우수상(남도전원한옥마을)을 배출하며 2년 연속 수상 기록을 세웠다. 단순 체험을 넘어 실제 전업으로 이어지게 만든 체계적인 정착 지원 시스템이 전남도 ‘귀농어귀촌 종합평가’ 우수상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이 밖에도 차별화된 청년·외국인 지원 정책으로 전남도 ‘인구정책 우수 시군’ 장려상을 받았으며, 모금액 15억원을 돌파한 고향사랑기부제 성과를 인정받아 SBS 주관 대상에서 특별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확보된 기부금은 소아청소년과 의료진 지원과 산후 조리비 등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사업에 재투자되고 있다.  
진도군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라며 “내년에도 일자리와 주거, 외국인 정착 지원 등 생활인구 확대 정책을 더욱 강화해 활력이 넘치는 진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진도=박세권 기자

## 무안군, 식품위생업소 종사자 보건증 발급 지원

4개 민간 병원 협약...1인당 1만7천원

무안군이 식품위생업소 종사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건강진단서(보건증) 발급 비용을 지원한다.  
28일 무안군에 따르면 식품위생법상 관련 업종 종사자는 매년 장티푸스와 폐결핵 등을 확인하는 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하지만 보건증 발급 수수료는 3천원인 반면, 일반 민간 병원은 2만원 상당으로 가격 차이가

커 생애에 바쁜 종사자들에게 적잖은 부담이 돼 왔다.  
군은 지난 19일 ▲무안종합병원 ▲남악운노리내과 의원 ▲남악복음내과 의원 ▲남악하나내과 의원 등 4개 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관내 2천700여개 업소 영업주와 종사자들은 지정된 민간 병원에서도 보건증과 동일한 3천원의 수수료만 내면 건강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나머지 차액(약 1만7천원)은 군이 전액 지원한다.  
/무안=김상호 기자